

## 1] 사회안전망 확충

성과지표	2014	2015	2016	2017
수급자 평균급여	42.3만원	47.2만원	49.3만원	51.3만원
사각지대 발굴 수	40만명	45만명	50만명	55만명
민간지원 연계 건수	470만건	540만건	590만건	650만건

### [1]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

#### □ 기초생활 보장의 맞춤형 급여 개편

- 맞춤형 급여 개편 시행('15.7.20 첫 지급)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('15.3월), 인력배치·교육('15.3~5월), 전산시스템 구축('15.6월) 등 철저한 준비

#### < 제도개편 내용 >

- 급여기준 개선: 최저생계비 기준 통합급여 지원 ⇒ **중위소득 기준** 급여별 다층화
  - \* 생계(복지부): 중위소득 30%, **의료(복지부): 중위소득 40%**,  
주거(국토부): 중위소득 43%, **교육(교육부): 중위소득 50%까지**
- 지원수준 확대: 수급자 수 134만명 → 210만명, 평균급여액 42.3만원 → 47.2만원
  - \* 주거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반영,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

#### □ 어려운 이웃에 대한 보호 강화

- (장애인 활동지원) 장애 3급까지 장애급여 제공 대상 확대
  - ※ 수혜인원: ('14) 53,400명(1-2급) → ('15 예상) 56,000명(1-3급)으로 2,600명 증가
- (독거노인·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) 가구 내에 화재·가스감지 센서 등을 설치하여 응급안전정보 전송, 응급상황시 소방서 출동
  - ※ ('14) 8.3만명 → ('15) 9.6만명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

- **(학대아동)** 아동보호전문시설을 확충하여 **즉시보호 강화**, 학대 발생 가정 모니터링·심리치료 등 위해 현장 인력을 대폭 증원
  - ※ 아동보호전문시설: ('14) 50개소→('15) 56개소로 확충
  - ※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: ('14) 450명→('15) 840명(심리치료전문가 기관별 2명 포함)  
학대피해아동쉼터: ('14) 72명→('15) 232명(심리치료전문가 기관별 1명 포함)으로 증원
  
- **(위기청소년)** 보호지원을 위한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동반자 확충
  - ※ 쉼터: ('14) 109개소→('15) 119개소, 청소년동반자 : ('14) 1,000명→('15) 1,044명
  -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출, 자살, 학교밖 청소년, 일탈 및 비행 등 위기 유형별 예측모형 및 선제적 위기대응 서비스 모델 개발
  
- **(결혼이민자)** 정착을 위한 **종합지원 패키지 보급 및 취업지원 강화**
  - ※ 다문화가족지원센터·출입국관리사무소·교육청·고용센터 등 연계매뉴얼 배포, 집중 거주지역 고용센터·새일센터에 취업지원 전담인력 배치
  - **위기노출** 결혼이주여성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상담인력 대상 **인권보호·폭력대응** 교육 확대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 **쉼터 증설**
    - ※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(보호시설) 증설: ('14) 24개소 → ('15) 25개소
  
- **(다문화가정 자녀)** 중도입국 학생 등의 **초기적응 지원** 및 기초 학력 보장을 위한 **다문화예비학교, 레인보우스쿨 확대**
  - ※ 다문화예비학교 : ('14) 80교 → ('15) 100교
  - ※ 레인보우스쿨 : ('14) 7개 시·도 12개 기관 → ('15) 12개 시·도 17개 기관
  
- **(한부모)** **아동양육비를 인상**하고('14, 연 84만원→'15, 연 120만원), 미혼 한부모가 실제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**기초생활보장 강화**
  - ※ 부양의무자와 갈등·관계단절 상황에 있는 미혼 한부모에 대해 지방생활 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부양거부·기피 사례 인정

- **(일본군위안부 피해자) 생활지원 확대 및 국제적 공감대 확산**
  - ※ 피해자 생활·정서지원 등 맞춤형 지원 확대,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추진 및 정부백서 발간('15.12월)
- **(농어촌·도서벽지) 주거환경과 생활 개선 위한 복지인프라 확충**
  - ※ 공동이용시설: ('15) 71개소(공동생활홈 35, 공동급식시설 20, 작은목욕탕 16)
  - ※ 돌봄시설: ('15) 22개소(공동아이돌봄센터·이동식 놀이교실 7, 주말돌봄방 15)

□ **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**

- **(처벌 강화) 아동학대 발생 즉시 해당시설 폐쇄 및 학대행위자 자격정지 근거를 마련하고 학대 교사·원장 영구퇴출**
  - 신고포상금 강화 등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, 어린이집 아동학대 특별점검 추진(경찰청 협조)
- **(CCTV 의무화)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부모의 CCTV 영상 열람권 제도화, 정보공시 강화(학대예방교육, CCTV 설치 등)**
- **(부모참여 활성화) 평가인증 부모참여를 강화하고 지표에 아동학대 예방 항목 확대 및 아동학대 안전인증제 도입**
  - 부모가 활용할 수 있는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보급
- **(교사자격 강화) 보육교사 양성체계(3급 과정, 사이버·학점은행 등)를 강화하고, 인·적성 검사 의무화 및 근무환경 개선\***
  - ※ 보조교사 확충, 정서·심리상담 프로그램 제공

## 【2】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

### □ 현장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

- ‘복지로’포털(도움신청·채팅상담) - 129콜센터(상담내역) - 행복e음(보유정보) 연계 및 활성화
  - ※ ‘복지로’ 포털에서 ‘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’ 간편검색 및 바로 신청, 본인 또는 이웃의 사연 신청 및 온라인상담 기능 제공
- 읍면동 민관협의체(8만명)·복지통(이)장(9.4만명)·좋은 이웃들(2만명) 등 지역사회 인적안전망 전국 확대를 통한 복지수요자 발굴
- 기초수급탈락자, 공공기관 보유 잠재 위기 정보 등을 분석·활용하는 “사각지대 관리시스템” 구축으로 잠재 위기가구 주기적 모니터링
  - ※ 단전·단수·단가스 가구, 위기학생, 건보료 체납 가구 등

### □ 필요한 도움 맞춤형 지원 및 서비스 이용편의 제고

- (복지서비스-일자리 연계) 고용복지+센터를 속도감 있게 확산하고(‘14, 10개소→’15, 31개소) 일자리·창업·금융·사회서비스 등 통합제공
  - ※ 매년 5개소 신설, 15개소 전환 추진, 장기적으로는 모든 센터 전환 목표
  - 일모아·워크넷-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 정보 연계, 대국민 고용·복지포털 구축 등 고용-복지 온라인 서비스 체계 마련
  - 기초수급자에게 근로장려세제(EITC)를 적용(‘15년, 근로소득에 비례하여 근로장려금 지급)하여 수급자 탈빈곤 지원 및 근로유인 제고
- (긴급복지) 일시적 위기에 대한 긴급지원을 2배로 확대하고(‘14, 약 8.4만건→’15, 15.6만건), 지자체 현장의 긴급지원 결정 재량 확대
  - ※ 위기상황별 사유를 조례로 규정, 신속지원 필요시 담당공무원 우선지원 등
- (에너지바우처) 취약계층 98만 가구(중위소득 40% 이하 노인·아동·장애인 가구) 대상으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(총 10만원 내외) 지원(‘15.12월~)

- (민간자원 연계)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('15.7월) 및 기부연금(나눔기본법 제정) 도입, 공동모금회·종교단체·지역기업 등 다양한 복지자원 연계
  - ※ 기부금 : ('14) 12.9조원 → ('15) 13.5조원
- (사회서비스 단일카드통합) 이용자가 서비스 별 카드를 발급·소지하는 불편 해소 위해 바우처카드 단계적 통합(국민행복카드 도입)
  - ※ 아이행복카드(보육료·유아학비 지원, '15.1월)→고운맘·맘편한카드('15.4월)→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지원('15.7월)→기저귀·조제분유 구매지원('15.10월)→아이돌봄('16.1월)

### 【3】 복지재정 관리 강화

#### □ 복지재정 누수 방지

- '복지로' 포털에 부적정수급 사례에 대한 익명신고 신설, 신고포상 확대 등으로 국민신고 상설화('14.11월~)
-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재정누수 원천 차단
  - ※ 사망의심자 확인기관 확대(13→ 17개), 지자체 확인조사 주기 단축(6월→ 월/분기)
- 복지조사 전담조직 가동, 소득·재산 확인조사(연2회), 전자바우처·의료급여 등 현지조사 실시
  - ※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정부-지자체 합동 현지점검(연3회) 등
- 불법 사무장병원, 허위부당청구 의심병원 등 조사확대 추진

#### □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유사·중복 사업 종합 정비

- 중앙부처(360개) 및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유사중복사업 정비
  - ※ 사업 통폐합, 전달체계 통합, 서비스 연계 등
-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안 마련('15. 상반기), 중앙 사업은 '16년 예산에 반영하고 지방 사업은 평가·지원 연계